

27 구글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까?

- 장 자크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 계약론]에서 시민 전체의 의지를 ‘일반의지’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의회제나 정당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일반의지에 기초한 통치야말로 이상적이라는 사고를 제시했다.

- 아즈마 히로키는 집단 지성을 불특정 다수에게서 뽑아내는 기술의 성공 사례로 구글을 뽑고, 같은 구조를 확장시켜 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구글은 비밀주의로 악명이 높으며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은 극비로 운영되어 있어 극소수의 일부 관계자밖에 접촉할 수 없다. 구글에 의지하는 민주주의는 극히 한정된 몇몇 사람들밖에 관여할 수 없는 알고리즘과 시스템, 즉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다.

- 시민 전원의 일반의지를 수렴하기 위한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극히 일부 인원에게 통제된다면 그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일반의지가 정말로 시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보증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극단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내포한 시스템이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면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 빅브라더와 같은 절대권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 집합적인 의사 결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그 집단 속에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람의 판단보다도 질 높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인공지능이나 통신기술이 이렇게까지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고대 그리스 때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민주주의의 운영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진화하는 테크놀로지를 어떠한 형태로든 운영에 이용할 것인가? 현대의 사회 운영방식에 많은 사람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프로세스의 블랙박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반의지에 의한 운용에는 커다란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그 사이 어느 선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나갈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다.